

혁명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24일(월)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대선평가

노동자 민중은 야권연대/정권교체 세력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이 민주당, 안철수 현상을 이끈 안철수 지지자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세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실패했다. 특히나 4월 총선은 야권단일후보가 거의 이길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실제로 4월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받은 전체 표수는 여당보다 앞섰다. 단지 의석수가 모자랐을 뿐이다.) 어쨌든 총선 패배로 인해 박근혜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중적 우려와 거부가 안철수를 정치권에 등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완벽히 부활했다.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야권연대/정권교체를 내세워 자양분을 공급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그 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대선을 치러 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나아가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안철수와 의 단일화까지 강제할 수 있었으며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세력을 자기 주위로 결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바탕해 비록 패하긴 했지만 1500만 표에 근접하는 놀라운 득표를 올렸다.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한 높은 득표로도 대선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었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세를 형성한 것은 노동자 민중 투쟁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를 당할 만큼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이미 철저히 외면당했다.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정권 10년에 대해 노동자 민중이 철저히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이 참패한 것도 결정적으로 그 때문이다. 동시에 진보정당 또한 이미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노무현정권 2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민주당에 대한 대안 세력이 전혀 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그러한 진보정당을 떠받치고 있었을 뿐이다.

어쨌든 민주당은 2007, 2008년 후로 10년을 집권한 여당의 면모를 완전히 잃고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으며 이명박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 촛불투쟁, 쌍용자동차투쟁,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 장기사업장투쟁, 희망버스, 희망텐트 투쟁 등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으며 여전히 그들 투쟁 현장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렇긴커녕 기껏해야 야4당 또는 야5당 중재안을 들고 나와 오히려 투쟁동력을 왜곡,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로부터 원성만을 들어야 했다.

그런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노동자 민중의 반MB 투쟁을 끊임없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두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둘째 거기에 진보정당,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협력한 것이다. 셋째 이런 정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정세, 정치, 대안 구심이 형성되지 못한 때문이다. 결국 그 때문에 야권연대/정권교체가 하나의 대세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야권연대/정권교체가 대세를 장악한 것은 결코 불가피한 필연도, 어

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대선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선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른바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결코 노동자 민중의 대안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대선 결과를 보수세력이 총 결집한 것에서 찾거나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에서 찾는 것은 현 정세의 계급적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한 분석은 반노동자적, 비계급적 관점에서의 정세인식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노동자 민중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노동자 민중 투쟁이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진전하는 것을 가로 막고, 공장과 거리에서의 투쟁 속에서 곧바로 대안을 찾지 않고 또 다시 다음 선거를 기다리게 하는 효과만을 계속해서 낳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른바 '야권연대/정권교체' 세력은 아직도 대선 패배의 원인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야권연대/정권교체' 세력은 노동자 민중이 느낄 자괴감과 절박함조차 또 다시 자신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게 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은 "그러나 새 정치를 바랐던 1천500만 국민의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니다"라며 "5년 뒤에 제대로 된 정권교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박근혜정권과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정세이지만 민주당은 당분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내부 기득권 다툼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분명하며, 그 뒤로도 기대할 바가 없다. 다가올 위기에서 저들이 노동자 민중과 함께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이 특별히 더 반노동자적, 비계급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한편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보수세력은 문재인을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대표주자(물론 당연히 아니지만)로서가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연장(이 점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으로 몰아붙여 그로부터 승리했다. 보수세력은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감지하고 있다. 동북아를 둘러싼 정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려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보수세력은 이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우파적 내용으로 집요하게 몰고 늘어졌다.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다. 박근혜는 포퓰리즘도 동원했다. 지난 대선 때와 같이 '경제성장'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여망이 있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앞세워 이명박정권과 차별화를 이루고, 이명박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박근혜를 아무리 유신독재와 연결시켜도 박근혜가 내세운 '잘살아 보세', '70% 중산층'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갔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박근혜를 노동자 민중의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재인에게 있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한 '유권자'가 박근혜를 지지한 '유권자'보다 더 계급적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근거도 별로 없다. 그보다는 노동자 민중이 계급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속에서 각 세대, 지역이 처한 역사성과 현재성이 박근혜와 문재인에게 각각 왜곡(그것이 불가피했다)되어 투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심지어 박근혜정권을 이명박정권의 연장이 아닌 새누리당으로의 정권교체로까지 받아들이는 현상마저 없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박근혜정권이 '반노동' 정권임이 확실하다는 것과 박근혜의 당선이 문재인 당선에 비해 특별히 더 반노동자적, 비계급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오히려 많은 부분 야권연대/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세력의 주관적, 당파적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

노동자 민중은 '민주/개혁/진보' 세력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정권과 힘겨운 싸움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아니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노동자 민중은 민주당은 물론 야권연대/정권교체를 주장한 세력에게, 이를 방조한 세력에게도 준엄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 자신이 비록 정권교체를 어떤 이유에서든 수긍했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래야 하며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자격이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아니었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정세는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가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 민중에게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자괴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를 지지한 노동자 민중들조차 조만간 박근혜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정세에 대비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문재인이 당선되었다고 해도 노동자 민중이 겪어야 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세를 갖출 수 있다. 머지않아 닥칠 거대한 계급투쟁 정세에서 지난 15년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오직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특히 젊은(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반자본주의 투쟁과 정치를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같은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르주아 정치 세력 사이의 정권교체에 계속 의존하는 것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당 노선과 이념으로도 반자본주의 투쟁과 정치는 조금도 조직하기 어렵다. 그것들과 철저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대선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혁명**



박근혜정권이 맞게 될 한반도, 동북아 정세

이번 2012 18대 대선이 박근혜 당선으로 귀결되면서 앞서 이루어진 러시아에서의 푸틴 정권의 재등장, 북의 김정은 체제 성립, 최근 미국에서 오바마의 재집권 성공, 중국에서의 시진핑으로의 정권이양, 일본에서의 아베(자민당)의 정권 탈환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이끌어 나갈 지배체제의 진용이 갖추어졌다. 이처럼 거의 동시에 각국에서 정권교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객관적으로 비록 시간적 우연이 겹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조만간 동북아에 들어 닥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정세가 형성될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정권 2기에서도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나 중국 포위/봉쇄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 아베정권도 재무장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미국도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권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노선과 정책을 취할 것임을 대선 기간 동안 이미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의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전 정권 때보다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원치 않겠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도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경한 태도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에 따라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싼 정치, 군사적 긴장이 '북핵' 문제를 등에 업고 더욱 가파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정세다.

박근혜정권은 바로 그러한 정세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박근혜정권이 맞이하게 될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이명박정권 아래에서보다 한층 더 예상하거나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가 펼쳐질 형국이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북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정권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박근혜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꾀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면에서 박근혜정권은 일관성조차 없는 이명박정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박근혜정권이 남북관계나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직접적인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머지않아 대중들로부터 정권에 대한 실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근혜정권 아래에서의 민주주의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은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은 곧 한국사회가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정치 선동을 펼쳤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른바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나아가 박근혜를 둘러싼 핵심 세력이 보수강경우파라는 점에서도 그러한 정치 선동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정치 선동에 일방적으로 휩쓸릴 것까지는 없다. 그러한 정치 선동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대선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르주아 정파 사이의 정쟁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선거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민주/진보/개혁' 세력 대 '유신독재 잔재' 세력의 구도로 몰아가기 위한 성격이 짙다. 또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도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부 진전,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부분 새로운 기득권층을 창출하는 데는 유용했는지 몰라도 노동자 민중에게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즉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통해 이미 현실에서 획득한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간 것이 없다. 오히려 '민주/개혁'을 앞세워 엉뚱하게도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된 측면이 훨씬 크다.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할 만큼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의 연장이거나 그보다는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것은 박근혜정권이 특별히 이명박정권보다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덜 민주적이어야 할 내적 필요나 필연 같은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보다 대통령, 정치쇄신을 앞세워 흩어진 민심을 추슬러줄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에 박근혜정권은 노동자 민중을 향해서는 원칙을 앞세워 강력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그 때 부딪히는 성격과 내용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노동 대 자본 또는 자본주의 대 반자본주의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말해 박근혜정권이 위기를 맞는다고 할 때 그 원인은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말한 바의 유신독재 잔재의 연장에서가 아니라 '반노동'으로부터 일 것이다. 이명박정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반민주' 아래에서의 '반노동'과 민주화 이후의 '반노동'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의 정세였다면 후자의 경우는 87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세다. '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는 것은 실은 그들 자신도 '반노동'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민주정부'임을 내세웠지만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배척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파시즘과 같은 정세가 도래하지 않는 한에서는 노동자 민중은 민주주의 투쟁에서조차 계급적 성격을 전면에 걸고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오직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직면하게 될 실제 위기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이명박정권 때보다 보다 훨씬 더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사실상 이제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더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만간 현실화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럴 경우 한국 경제가 유럽위기로부터는 받는 여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늦어도 향후 1~2년 안에 한국 경제가 더욱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물론 지금 현재도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수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그조차 효과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고환율을 고집한다면 그에 따른 대중의 불만과 반발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상수지가 그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감소에 따른 이른바 '불황 흑자'일 뿐이다. 거기다가 한국 금융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그로 인해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권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제상황은 있지 않다.

그럼에도 박근혜정권은 실제야 어찌됐던 당분간 이명박정권처럼 노골적인 '친자본' 태도를 드러낼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권이 '반노동' 정권이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박근혜정권이 이명박정권과 같은, 아니 이명박정권보다 보다 더 강경하게 '반노동'을 당장 밀어붙일 것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그것들이 바로 이명박정권을 위기로 몰아간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은 오히려 얼마동안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 수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공약 자체가 이미 노동자에게는 '반노동'인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지만 말이다. 또한 박근혜정권을 탄생시킨 하나의 계기로 작용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은 조만간 박근혜정권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벌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어떤 실효도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정권이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부터이다. 하나는 방금 위에서 예측한 전망을 무너뜨리고 정권 초기부터 바로 노동자 민중에게 대한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이다. 그럴 경우 박근혜정권은 예상보다 빨리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위기로 접어들 때이다. 이 위기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밀려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이 때부터 박근혜정권은 본격적인 시한부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권이 노골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향해 공격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다. 이 때에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박근혜를 반대한 세력들로부터의 공격도 함께 가중될 수 있으며, 나아가 박근혜를 지지한 일부 세력도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명박정권 아래에서도 충분히 드러난 것들이다. **혁명**